

의안번호	제 552 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10월 일 (제 324 회)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13년 10월 15일

#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의안 번호	552
----------	-----

제안연월일 : 2013년 10월 15일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 1. 제안 사유

-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내년 7월 1일자로 출범이 예정된 통합 청주시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가결하였음.
- 정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청원·청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차례 약속 하였고, 박근혜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청주·청원 통합은 충북발전의 옥동자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음.
-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통합 사업비 115억원,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76억원, 청사정비·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 69억원 등 직접경비 총26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조를 요청해 통합 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필수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2. 보낼 곳 : 청와대, 국무총리실, 새누리당, 민주당, 국회예결산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님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과 충북지역 국회의원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내년 7월 1일자로 출범이 예정된 통합 청주시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가결하여, 정부 정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한 충북도민들은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청원·청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차례 약속 하였고, 이를 기대하며 통합을 이룬 주민들에게 청원·청주의 자율통합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주도형 자율통합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청주·청원 통합은 충북발전의 옥동자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예산안에 통합청주시 지원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선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한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시스템통합 사업비 115억원,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76억원, 청사정비·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 69억원 등 직접경비 총26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통합은 사실상 어려우며, 주민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로 인식하여 정부는 앞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됨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과 정치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의 경제적 가치를 흔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이라 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약속을 불신한다면 지금보다 몇배의 더 큰 부담을 미래에 감당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박근혜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조를 요청해 통합 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청원·청주 자율통합을 이뤄 낸 충북도민을 존중하여 새누리

당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필수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  
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충북도민의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160만 충북도민의 저항과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13. 10. 17.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